

KIAT,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중소·중견기업 전환 지원 본격화

산업부·14개 기관과 협약 체결
190억 투입해 전처리 기술 개발
플랫폼 공동 활용·개발 본격화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속도전
글로벌 AI 강국 도약 발판 마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AI(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

KIAT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산업 데이터 전처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전처리(IDP, Industrial AI Data Preprocessing)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하도록 정리·가공하는 핵심 절차다.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사전 유지보수 등 산업 현장에서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올해부터 시작한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KIAT는 오는 2028년까지 약 190억



곽용원 KIAT 첨단산업공급망단 단장 등이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 발족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원을 투입해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업종별 특화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AI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KIAT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인터엑스, 팅스파이어, 루트17, 인이지, HL만도, 대동기어, 대동금속, 한국남부발전,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을 공동 활용·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

성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열린 혁신 포럼에서는 인터엑스와 인이지가 각각 산업 현장의 데이터 전처리 플랫폼 기술과 AI 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 데이터 전처리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계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AI 기반 제조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신재생 설비 AI 전환 시동

풍력·태양광 결합 판독 데이터 구축
연말까지 AI 학습 기반 체계 마련
민간 연구개발에 전면 개방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가운데 최초로 신재생 설비 운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AI 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

로 한 '결합 자동 판독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 중인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주요 결함 사례를 포함해 정상·비정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발전은 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총괄하고, 남부발전이 수요기관으로 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주관기관인 어드바이저로렌, 참여기관인 보다가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링을 담당하

는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으로 신재생 설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연구기관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결합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의 AI 강국 실현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FDI 투자 애로 해소 전담 지원체계 가동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출범
제조업·中·日 투자 위축 뚜렷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를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

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음부즈만, IK(Invest Korea) 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멀티탭·콘센트 사고 5년간 387건 발생

산업부 국표원, 안전주의보 발령

가정 내 필수 가전 사용 확대와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과부하로 인한 화재·화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피해의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집중돼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멀티탭 등 안전사고가 총 387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79건,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으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사고 원인 중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84.6%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증상은 화상 48.3%, 전선 손상 17.5% 등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에어컨 등 냉방기 사



진주소방서, 여름철 멀티탭·콘센트 화재. /뉴스1

용이 많은 '여름'(32.3%) 외에도 '가을'(26.1%)에도 안전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사례 239건 중 절반(48.1%)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소비자에게 ▲멀티탭 정격용량 초과 금지 ▲멀티탭 중첩 사용 금지 ▲고소비전력 제품은 전용 콘센트 사용 ▲전선 손상 방지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차세대 전력인재 양성 본격화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개원

한국폴리텍대학이 4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원 설립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에 맞춰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한전·전력거래소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는 '에너지 수도'로 불리며 전력·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하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한전·전력거래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력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총 306억원(건립비 236억원, 장비비 70억원)이 투입돼 1만5764㎡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050㎡ 규모로 건립됐다. 2층 전력설비과, 3층 신재생에너지과·전기소방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되며,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전력IT수배전랩(LAB)' 등 실습시설도 갖췄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근로감독관 새 이름 국민 공모

25일까지 3주간 명칭 공모 진행
노동부 홈페이지·SNS로 참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노동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 방식으로 병행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산업현장 안전 확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행정의 최일선 주

체'로서 위상이 한층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결과는 국민 참여 의견과 함께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는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 집행과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해 '민생 노동행정'의 최전선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